

# 후보지 선정·주민투표·1조 재원 마련…넘어야 할 산 많다

## 이전 과정과 남은 과제

끝 아닌 고난도 행정 절차의 시작  
설계·보상·공사 등 최소 10년 걸려  
재원 마련 위해 특별법도 개정해야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17일 열린 '6자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이전 절차와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2014년 첫 이전 건의서 제출 이후 10년 넘게 표류해 온 속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의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가시화됐지만, 2027년 최종 부지 선정까지는 주민투표라는 거대한 암초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첨첩산중으로 남아있다. 이날 6자 회담의 합의는 '끝'이 아닌 고난도 행정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합의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국방부와 광주시가 제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전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를 공식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8월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정'하다고 통보한 지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실질적인 진전이다.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곧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1월과 2월 두 달간 이어진다. 단순히 후보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이전 시 지역에 들어갈 인센티브와 소음 피해 대책 등을 주민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왼쪽)과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국제공항 전경. 광주 군공항 이전이 17일 열린 '6자 회담'에서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정부와 광주시·전남도 등은 군공항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첫 번째 과제이다.

이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국방부 주관으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핵심 기구다. 이 기간이 지나면 7월과 8월 두 달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이전후보지'가 선정된다. 예비 딕지를 떼고 본격적인 협상을 대상화가 정해지는 셈이다.

이전후보지가 정해지면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전 후보지 공청회가 열린다. 이때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계획에 직접 반영되는 단계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0월과 11월 사이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 지원계획은 군공항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제공할 구체적인 보상안을 담고 있어 향후 주민투표의 핵심을 가를 결정적인 '당근'이 될 전망이다.

도로 개설, 지역 개발 기금 지원, 소음 완충 지역

조성 등 수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얼마나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설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어 2026년 12월에는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게 된다.

공항이전 로드맵에서 최대 분수령은 2026년 12월로 예정된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단계다. 국방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법 등에 따르면 주민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유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면 사업은 그 즉시 좌초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같은 기피 시설 유치 문제는 친반 갈등이 극심해 투표율 자체가 저조하거나 반대 여론이 조직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여기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단순히 일정이 지연되는 수준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 과정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

작해야 하는 죄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원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투표라는 높은 파고를 넘더라도 끝이 아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1월,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부지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인 광주시는 이때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 토지 보상, 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만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문제도 막걸리 해소되지 않았다. 6자 협의체는 무안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규모를 '총 1조원'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셈법은 여전히 모호하다.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한 1500억원 외에 나머지 8500억원 상당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기부 대 양여' 차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짐으로 남거나 사업 지연의 불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약속했고, 마군 시설 이전 비용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투표 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정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 했지만, 내년 말 주민투표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기 전까지 광주시와 정부는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948년 학동에 첫 등지…송정리 시대 거쳐 77년 만에 '이별' 준비

### 광주 군공항의 역사

광주의 역사와 함께온 군공항은 한때 '국가 안보의 보루'였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굴곡진 세월을 겪어왔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공항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인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시 동구 학동에 처음 등지를 턴 광주비행장은 1949년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면서 전남 지역의 하늘길을 열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됐고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64년 1월, 지금의 위치인 광산구 신촌동(당시 광산군 송정읍)으로 자리옮김 새월을 겪었다.

군공항으로서의 위상은 1966년 더욱 공고해졌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이 이곳으로 창설·이전해 오면서다. 이때부터 광주 군공항은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를 운용하는 등 정예 조종사

를 양성하고 서남부 영공을 수호하는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했다.

당시만 해도 송정리 일대는 허허벌판 외곽 지역이었기에 소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군부대 주둔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꾹꾹기도 했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상무대(육군 보병학교 등)가 장성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상무지구'가 들어서면서 갈등의 불씨가 끼쳤다.

광주의 도심이 서쪽으로 급격히 팽창하자, 외곽에 있던 군공항이 사실상 도심 한복판에 갇히는 형국이 됐다.

2000년대 들어 광주가 광역 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갈수록 전투기 굉음은 시민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고통이 됐다.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전화 통화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 피해가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광주시가 매년 국방부와 소음 피해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도 반복됐다.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국방부에 처음으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6년 국방부로부터 이전 타당성 '적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인근 지자체의 반발과 정치적 쟁의가 맞물리며 사업은 10년 넘게 표류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지난 10년은 광주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7일,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관계 당국이 마주 앉는 6자 회담에서 77년을 이어온 '굉음의 역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민단체 "정부가 이전 주도" … 광주시 "상생의 길 가자"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위한 '6자 회담 합의'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불공정 협약'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18년 동안 꽉 막혀있던 현안을 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협은 "합의안에는 광주시가 2027년까지 민간공항을 보내고 1조원을 지원한다는 책무는 명확히 명시된 반면, 이에 상응해야 할 정부와 무안군의 역할은 '적극 협력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칫 광주 민간공항만 내주고 군 공항은 그대로 남는 죄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기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유지하기로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협은 "최소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 주도의 특별법 개정과 무안군의 군 공항 수용 절차 이행을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시민사회와의 우려가 '광주 공동체'를 위한 충정임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의 교착 상태를 끊어내지 못하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며 이해를 구했다. 시민단체는 광주의 일방적 희생을 우려하고 있고, 시는 교착 상태를 끌내기 위한 현실적 타협을 강조하며 설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영선 통합공항 교통국장은 "현재 구조를 탐습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군 공항을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통합해 광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무안은 '서남권 관문 공항 도시'로 도약하는 상생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십 년간 표류해온 군 공항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